

# 이 대통령, 양대 노총위원장 만나 “사용자와 대화해서 오해 풀어야”

## “경사노위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악순환 풀려면 일단 마주앉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말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계가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실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산업재해, 체불 임금 등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저더러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며 “오리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봤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한테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냐”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 양쪽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52시간 근무 상한제’ 토론을 직접 주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분명히 동그란 것인데 한 쪽은 세모라고 하고, 한 쪽은 네모라고 하며 싸우고 있잖아 ‘동그라미’라고 보여줬더니 (양쪽 다) 안 믿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있을지 모르는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복구를 결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도 밝히면서 “그 문제도 한 번 같이 논의 해보자”고 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라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앉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된다. 한 쪽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 뒷수를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대화를) 안 해 버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편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속의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은 노동 입법에 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하는 동시에,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자율 협약을 통해서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간담회에서 양경수(왼쪽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왼쪽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위원장, 이대통령, 양위원장, 문진영 사회수석. /대통령실실용사진기자단

할 것 같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

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

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 ‘노무현 직함’ 공정성 시비... 예비후보들 “여론조사 보이콧”

내년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 직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이름 사용을 반대하는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노무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는 공식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겸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영향력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예비후보는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노무현 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지지율이 급등하는 사태를 지켜보았다”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과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과 유명인사의 상징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 이름을 경력에 포함시켜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영향력을

오경미 전 국장·정성훈 전 지부장 여론조사 불참

김용태 전 지부장 “공직선거법상 문제없다” 반박

펼쳐다 쓰는 행위로, 교육을 정치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두 예비후보는 “선관위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심각한 왜곡과 편향을 발생시키는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의 이름을 직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예비후보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광주시교육감 선거 관련 모든 여론조사에 후보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을 여론조사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상대 후보들이 불리하자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부장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다”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어 앞으로 같은 직함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그동안 살아온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며 “경쟁 후보들이 불리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인 만큼 조사 문항이나 응답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응답자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연상시키고, 이는 곧 응답 편향을 유발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기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기준이 권고에 불과한 데다가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광수 기자

##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발언한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최강욱, 성비위 의혹 문제 삼자 “개돼지” 표현해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 강간했다” 발언도

정청래,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 “감찰단 진상조사 결과 보고나서 판단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들고 “개돼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지난 4월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강연 당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가 어떻든 그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며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최 원장은 “그 다음에 판단이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이야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한 바탕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싶다)”라며 “누가 한동훈 처남처럼 무슨 여 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

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서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시는지 정확히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내가 알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한 김미경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 원장 발언에 대해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 녹취 파일을 보내주셨다”며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최 원장 논란과 관련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감찰단에 진상을 한 번 파악해보라”고 했으니 이제 (결과를) 보고나서 또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과 직접 소통을 했는 가라는 질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해당라”고만 답했다. /뉴시스

##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NGEF 2025

2025. 9. 17.(수)~18.(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10 노벨물리학상



**9.17.(수) 10:30**

**시민특강**  
과학분야 유튜브 1위 **과학을 보다**

M C I 정영진 프로  
출연인 | 권석준 교수 | 김범준 교수 | 김선교 교수 | 우주먼지 지용배

**9.17.(수) 18:00**

### 주요 일정 안내

일정	프로그램
9.17.(수)	10:00 - 10:30 [내빈환담] 인사말씀, 퍼포먼스 등
	10:30 - 11:50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대담)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
	11:50 - 12:30 전시장 투어
9.18.(목)	14:00 - 16:00 [세션 1] AI for Energy
	18:00 - 19:30 [시민특강] 유튜브 과학을 보다
	10:00 - 12:00 [세션 2] e2i Square & Innovation
	14:00 - 16:00 [세션 3] Energy for AI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 NAU 나주시 NAJU CITY |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주관 | 녹색에너지연구원 Green Energy Institute

특별파트너 | 동산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대학교 | 후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광주은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